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3 (금) 16:40 ~ 18:10

〈세션3〉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사회: 백승호 (가톨릭대)

발표1: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정의당의 경험(청년사회상속제)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2: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녹색당의 경험
이상희 (서울녹색당공동위원장)

발표3: 기본소득과 복지정치운동, 청년네트워크의 경험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정의당의 기본소득 당론화 정치과정 경험 사례

고광용(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정의당 기본소득제 첫 논의

□ 심상정 전 대표의 원내비교섭단체 대표연설(2016년)

- 2016년 9월 20일, 우리당 심상정 전 대표는 원내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함. 이 배경은 2016년 9월 7일(수) 아침, 당내 정의구현정책단 6차 월례포럼에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이 오셔서 “기본소득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20160920)-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으로 기본소득제, 살찐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이며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돼야 형성한다.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이상)을 대상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하자. 이후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게도 단계적 확대적용을 검토하자.”

- 이후 10월 경, 임시당대회 특별결의문 채택과정에서 당초 심상정 대표가 상기의 대표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당론으로 명시했으나 전국위원 몇 분이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찬반양론이 있으니 [기본소득을->기본적인 소득보장]으로 문구를 바꾼 수정결의안을 제안하여 통과됨

2. 정의당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1

(당내(정의정책연구소·운소하의원) 기본소득(안) 제안 및 논의과정)

- 정의정책연구소: 당원 대상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 실시(2016년 10월) 및 논란
 - 연구소(담당자 저, 설문조사지 작성)는 기본소득에 대한 당원 인식 및 입장에 대해 묻는 당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에 당원게시판을 통해 임시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제기한 전국위원이 임시당대회 (수정)특별결의안을 근거로 설문조사 중단 및 폐기를 요청함. 건강정치위원장은 심상정대표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연구소는 당내 토론·논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해명을 했으나 결국, 공개는 하지 못하고, 당 지도부 및 내부 공유자료로만 활용함

[비공개사항] 미공개된 정의당 당원 기본소득 여론조사 결과(16년 10월)-약1200명

1. 기본소득 인지정도: 인지(89.5%), 비인지(10.5%)
2. 기본소득 이해정도: 이해(73.0%), 이름만 앎(17.2%), 잘모름(9.8%)
3. 기본소득 찬반: 찬성(90.7%-매우찬성(51.1%), 어느정도찬성(39.6%)), 반대(7.1%)
4. 기본소득 찬성 이유: 최저생활보장(56.4%), 소득재분배 효과(22.7%)
5. 기본소득 반대 이유: 자원과다소요(36.0%), 소득재분배 효과낮음(19.8%), 부자에 줄 이유없어(18.6%)

-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식 기본소득(안)] 발표, 토론회 개최 및 논란
 - 연구소는 '16년 11월 15일, [정의당식 기본소득 구상과 전략 보고서] 발표, 강남훈 교수님 기본소득제(안) 바탕으로, 기존 운용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의 전환·통합운용 및 캐나다 세금환수제(클로백) 적용한 영유아(0~5세)·청년(19~24세)·노인대상(65세이상) 월30만원(연360만원) 생애주기형 차등과세 기본소득제(안)를 제안함. 보편적 현금수당 확대=기본소득의 유사성 주장

<표> 정의당식 기본소득(안) 예산소요액 추산

통계청 '15년 주민등록인구	기본소득액 (30만원*12월)	예산소요액 (조원)	현행 유사제도 지출/예산(조원)	현행 유사 제도
영유아(0~5세)	3,600,000	9.86	1.86	양육수당
청년(19~24세)		15.27	-	-
노인(65세이상)		24.39	6.84	*기초노령연금(추산)
1단계 총 예산소요액		49.52	8.7	순 추가소요액 40.82조원

주1 : 1.86조원은 '16년 기준 가정양육수당 예산

주2 :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상당수가 20.4만원이지만, 소득과 국민연금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기 때문에, 대략 20.4만원*65세이상 인구로 추산한 값임

<표> 기본소득제(안) 세금환수제도(캐나다 클로백 적용) 설계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제혜택)	기본소득액	세율적용 방식	환수액
8,800만원 이하	3,600,000	기본소득 미합산과세	없음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600,000	기본소득 합산과세 35%	없음
1억 5,000만원 초과	3,600,000	기본소득 합산과세 38%	1,800,000

★ 정의당식 기본소득제(안) 재원마련 방안

41조원 = 정의당 2016총선 증세방안(37.5조원)+박근혜 정부 SOC
예산절감계획(3.5조원)

*정의당 2016총선 증세공약(37.5조원) : 사회복지세(20조원 내외)+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 수준 회복(8조원)+소득세 누진세율 강화(3.5조원)+부동산 보유세 과세강화(4조원)+특혜성 금융소득 세율적용 폐지(2조원)+*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SOC 예산절감 계획'(16년 3.5조원)

○ 각종 당내 논란 요약

- 2017년 2월 1일(수), 정의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제 당내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전통적 복지국가론자(기본소득반대)인 건강정치위원장 등은 기본소득론의 논거인 무조건성 보편주의 및 개별성의 문제, 기존 복지 수급자의 복지수급 악화 등을 지적하고 현금성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반대함. 현금중심 복지 확대는 복지시장화를 초래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는 관점을 비판함
- 다른 의견: 아동수당 도입·확대, 노인 기초연금 확대 필요하나 기본소득제화는 반대, 청년대상 기본소득제는 찬성 등등
- 현금성 사회수당의 확대와 기본소득의 유사성 논의,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추가적 논의, 기본소득이 기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우월성은?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사례 교훈) 당내 논란의 이유 분석 및 시사점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진행과 한계는 2019년 선거를 염두해 둔 정치적 요인에 근거함. 기본소득의 정치적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논의 속에 귀결된 2천만 유로 예산, 2천명 표본, 2년의 실험기간 등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
- 기본소득 실험의 찬성파에 좌파 정당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파에는 전통적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주의자/조직노조로,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왜 전통적 복지국가론자들과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조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지를 설명해줌. 또한 시간제 알바노동자들이나 좌파 정당이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

-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조직노조의 대변자이면서 동시에 이와 입장이 조금 상이한 비정규직/시간제(알바) 청년노동자 및 불안정노동자 모두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의당의 기본소득 입장은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시사점1) 급진적 방식 혹은 경제적 보수우파 논리에 가까운 현행 복지체계를 무너뜨리고 전면적(완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당이 구상하는 복지국가와는 전혀 다르기에 적절하지 않음. 철학적 맥락은 다르나 사민주의·복지국가론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현금수당 확대와 부분적 기본소득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동의되는 지점에서 한국형 부분적 기본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향
- (시사점2) 즉,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시작하여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사회취약 계층이나 집단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유지 및 확대하되, 기존의 선택적 현금수당을 정리하고, 점차 10~30만원 수준의 보편적 현금수당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향후 세원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서 수혜대상을 국민 전체로 점진적 확대해나가야 함. 기본소득(수당이나 급여) 수준 또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정의당이 향후 기본소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로 보았음
- 이에 상기 시사점을 담아 다음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고서 제출

연구소, <한국형 기본소득제 구상 및 단계적 실현방안> 구상안 제출

·1단계 기존 사회보장체계 정비

- 1)현 사회보장 체계 합리적 조정
- 2)실업부조 및 새로운 범주형 사회부조 도입과 기초생보의 생계급여 확대

·2단계 과도적 기본소득(사회수당 개념 도입 및 점차 확대)

- 3)취약계층 중심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사회수당(30만원) 구축
- 4)참여소득 형태 농민(농촌형) 기본소득(20만원)과 광역별(국비·지방(시도·시군구)비 매칭) 청년수당·배당) 도입

·3단계 완전 기본소득화(사회수당체계 통합 및 국민전체 확대)

- 6)인구집단(아동·노인)별 수당의 연령 확대(예, 아동(만0~5세)에서 청소년(1차 만12세, 2차 만18세)으로 점차 확대)
- 7)국가 청년(만19세~만24세) 기본소득(청년수당/청년배당) 도입
- 8)각종 사회수당 통합

·4단계 완전 기본소득 달성

- 9)약 30만원 수준 전환적 기본소득 운영
- 10)기본수준 상향 조정 및 완전 기본소득 완성(약 50만원)

자료: 고광용(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기본소득제 구상 및 단계적 실현방안, 정의정책연구소 정부행정 분야 연구보고서(20170928).

- 윤소하의원: 농민기본소득 보장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
 - 윤소하 의원은 2017년 2월~3월에 4회에 걸쳐, 직불제 중심의 농업예산 개혁 바탕 ‘농민기본소득 보장 위한 농민수당 도입’ 주제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함,
 - 농민수당 도입은 기존 당론이었기에 큰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당론으로 채택됨

3. 정의당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2(청년기본소득의 일환, 청년사회상속제의 탄생)

- 정태인 소장의 제안으로 시작
 - 2016년 12월, 정의당 정책자문기구인 <정의구현정책단(‘16년 1월 발족, 단장 정태인)> 월례포럼에서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장이 정부 상속·증여세 약 5.4조원인데, 20세 청년 약 60만명에 1/n해서 약 1천만원씩 청년들에게 국가가 사회상속을 해줄 수 있다고 최초로 주장했으며, ‘기초자산(기초상속)’ 제도를 제안했음
- 심상정 대선후보 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 도입 주장 [첨부 해설자료 참고]
 - 2017년 3월 24일, 심상정 대선후보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1인당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연합뉴스 2017년 3월 24일).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상속제는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으로 20~25세 청년은 원하는 시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배당금 1천만원은 2017년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 5.4조원을 20세 인구 추정치 60만명으로 나눈 근삿값이라 설명함
 - 전여옥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안영환 전 의원 등이 청년사회상속제를 최고의 공약으로 선정하고 극찬함
 - 청년기본소득을 통한 매월 현금 지급과 달리 기존 상속증여세 취지와 부합되면서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내 큰 논란 없이 당론으로 채택됨

4. 기본소득 당론화 결과: 정의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긴 기본소득

- 정의당의 당론으로 명시: 거시적 정책방향이 담긴 발간사 중(대선 정책공약집 p.7)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과감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와 지급 기간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연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생애주기 기본소득제(안)·청년사회상속제·농민기본소득 (부분적) 채택

생애주기	기본소득제(안)		정의당 19대 대선공약(집) 제7회 지방선거 공약(집) 계승
영유아 (0~5세)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통합	월30만원 (연360만원)	(p.18) 모든 아동에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아동수당 10만원, 클로백 적용
청년 (19~24세)	-		(p.30) 상속증여세 5.4조원을 20세 모든 청년에 1,000만원(*월30만원 약3년 지급액) 배당(25세까지 배당시 기 선택), 클로백 적용
노인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p.45) 100%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 금 월 30만원 지급, 캐나다 클로백 제도 도입
농민 (65세미만)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p.68) 65세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노인 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 중.

□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 당내 분위기

- 대선·지방선거 공약에 기본소득(제)가 (부분)채택되고 심상정 전 대표의 각종 언론
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대선과정 및 최근 jtbc 토론회 등)에
서 자주 등장)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현금성 수당 강화(확대)형 기본소득에 대해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 현재 정의당의 당론 및 공약을 보면, 당내 논란이 있어서, 당장 농민기본소득 외
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아동수당·청년사회상속제·기초
연금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모든 아동/청년/어르신) 지급을 명시하
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기본소득에 가까움. 청년사회상속제는 ‘모든 청년에 지급하
는 사회적 지분급여 형태의 배당이며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음.
기초연금 30만원의 경우 공약명이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으로 사실
상 노인기본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당원들의 기본
소득에 대한 인지도 및 찬성 수준이 높기에 자연스럽게 기본소득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아동수당과 농민기본소득액이 10~2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가 이중으로 있는 상황이고,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직불금
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향후 초저출산, 농촌경제 위기 심화 및 직
불제 개편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액수는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임

「청년사회상속제」 해설자료

2017.7.7. 정의당 정책위원회

1. 「청년사회상속제」가 무엇인가요?

「청년사회상속제」는 올해 5월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속'에 대한 철학부터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상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로 첫 출발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태어난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사회상속제 주요 내용

-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25세까지 배당 시기 본인 선택)
- 상속 증여세 5조 4천억원(2017년 기준)을 20세 청년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는 환수(클로백 제도),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지원청탁금은 2,000만원으로 인상

출처 :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 「청년사회상속제」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돈도 살력이야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최순실의 딸 정유리가 한 말입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 말에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낀 이유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 바로 '청년사회상속제'입니다.

3. 「청년사회상속제」 정책공약 개발과정은 어떠했나요?

작년 12월 정의당 정책자문기구인 <정의구현정책단> 월례포럼에서 정태인 단장(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초자산(기초상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등에서 논의를 거쳐 지금과 같은 내용의 공약안을 마련하였고 3월 24일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년사회상속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 청년사회상속 배당금 1,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가요?

정부는 해마다 상속증여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20세 모든 청년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422억원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은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대략 1,000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래인구 추계 (만 19세~ 24세)					
					(단위: 명)
연령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만 19세	614,881	621,837	597,159	514,713	479,413
만 20세	653,757	618,301	625,059	600,112	517,601
만 21세	675,796	657,250	621,648	628,143	602,957
만 22세	704,244	680,420	661,671	625,867	632,061
만 23세	709,091	709,500	685,482	666,515	630,449
만 24세	721,998	713,569	713,801	689,631	670,466

출처: 통계청 (2017.1.26. 기준)

5. 청년들이 지금 받게 되는 배당금 1,000만원의 사용처는 정해져 있나요?

청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배당하지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입니다. 청년들은 배당받은 1,000만원을 주거비, 학자금, 창업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둘 수도 있습니다.

6.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꼭 20세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지만, 지급받는 시기는 본인이 25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는 24~25세 청년 5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받은 배당금을 모아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한 해에 얼마나 걷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하균등의 취지를 담고 있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빈부격차가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조세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상속세와 증여세 세입은 연평균 4.7조원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422억원입니다.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공약하였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 증여세 재계산제도, 세대 생략 상속증여 환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 정책으로 연간 70조원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년도	상속세	증여세	연간합계
2012	1.7	2.3	4.0
2013	1.6	2.7	4.3
2014	1.7	2.9	4.6
2015	1.9	3.1	5.0
2016	2.0	3.4	5.4
합계	8.9	14.4	23.5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8.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로백 제도를 「청년사회상속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20세 이전에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수 대상은 상위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클로백(Clawback) 제도 사례
<p>캐나다에서는 노인연금(Old Age Security)에 클로백(Clawb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고령층에 대해 과세 형식으로 연금급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노인 연금 대상자 중 당해 보우예금 혹은 총소득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1달러당 15센트씩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노인연금을 관장하는 캐나다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노인연금 대상의 5% 기량이 클로백(Clawback)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p> <p>일본에서는 고소득자의 연금감액 및 고령층 특례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연금급여액을 본래 수준대로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p>

출처 : LGER리포트 (2017.7. 이혜림 선임연구원)

9. 이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두배로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동보호법」 따르면 보호대상 이동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0 ~ 5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가 실시되면 이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에게는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이 2배로 지급될 것입니다. 2,0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상속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입니다. 특별히 이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20세가 되기 이전이라도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